



소련사태와 국제석유사정

金 乾 治

〈本誌 편집인〉

공산주의의 吊鐘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것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지금 인류는 금세기 최대의 세계사적 대변혁을 눈앞에 보고 있다. 지난 74년간 「붉은帝國」소련을 지배하며 20세기 세계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소련공산당이 종언을 고했다. 또 소련공산주의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소련제국의 붕괴를 가져와 그동안 소련으로 통칭해온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 엄청난 역사의 대변혁을 보면서 행여 해빙하는 얼음의 파장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 버릴수 없는 것은 우리 같은 석유분야 종사자들 뿐만은 아닐 것이다. 당장 장미빛 미래를 내다 보기에는 소련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Salomon Bros社는 소련 석유의 문제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의 지위를 계속 누릴수 있는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광대한 석유자원을 개발할수 있는 기술과 조직능력과 정치적 단일협력체를 가질수 있게 되느냐라고 평가한바 있다. 현재 생산은 감소되고 있고 물가는 뛰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공화국정부간의 알력이 있다. 요컨대 「풍요속의 위기」라는 것이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소련 유전장비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작년초에 인종분쟁이 일어나 장비부족을 가져옴으로써 소련의 석유시추실적이 작년엔 1,100만피트-1천5백개井 시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탐사지역을 개발하고 개발의 속도를 개선시키며, 보다 효율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경영의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않는한 현재의 석유생산 감소추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침체일로의 소련 에너지산업은 서방의 자본과 기술지원 없이는 회생되기 어렵다. 이번 소련사태에서 그동안 서방자본 유입의 걸림돌이었던 보수강경파세력이 거세됨에 따라 서방의 對소련 투자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보수강경세력이 제거되었다하더라도 소련이 본격적인 개혁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다. 소련 에너지산업의 재도약은 이러한 전환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소련의 에너지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는 소련이 당면한 정치 경제적 과제들이 결집되어 있다. 첫째 경제침체와 투자부진으로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에너지생산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석유설비의 60~80%, 전력설비의 30%가 노후화되어 있고, 송유관 가스관도 낡아서 대형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둘째는 계획경제체제와 가격구조의 왜곡으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셋째는 자원권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공화국정부들간의 정치적 대립문제이다. 자원은 소련 최대의 재정收入源이기 때문에 자원권의 이동은 곧 권력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원권은 연방정부와 공화국·지방정부들간의 새로운 질서정립과 함께 정착되어야 할 문제이다. 아직도 권력구조나 자원권의 혼란 때문에 계약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서방투자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결과 소련의 국내정치상황은 진통을 보이고 있으나 보수세력의 퇴조로 개혁의 가장 큰

장애는 제거된셈이다. 앞으로 소련의 개혁과 시장 경제로의 전환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고 서방자본의 對蘇투자는 활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가시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요구하며 對蘇지원에 소극적이던 서방선진국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對蘇지원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수세력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소련의 개혁추진에는 많은 문제가 가로 막고 있다. 소련은 고유의 언어와 역사를 가진 민족만도 유럽계·아시아계등을 합쳐 1백 20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15개 공화국 이외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받는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구등도 모두 38개나 되고 있다. 소련은 앞으로 중앙권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개혁추진과정에서 분출될 지역집단간의 이해를 원만히 조정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자원권도 이번 신연방조약에 따라 공화국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공화국정부와 공화국내 자치정부간의 자원권분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 형편없이 낮은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다.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경제적으로는 에너지수급을 합리화하고 정치적으로는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잦은 파업의 원인이었던 탄광이나 유전지역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물가폭등은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불안과 혼란의 요인이 될 것이며, 자원권이 공화국으로 귀속된 상태에서는 자원이 풍부한 공화국과 그렇지 못한 공화국간의 새로운 지역분쟁의 될 가능성도 있다.

얼마전까지 전문가들은 소련의 진로를 방해하는 법적·행정적·정치적 장애요인이 제거된다면 수년내에 사태는 반전되리라고 내다 보았다. 그런데 이미 사태반전의 계기는 마련되었다. 이번 소련자유주의의 승리와 공산당 해체는 세계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사태의 추이는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소련의 안정은 곧 세계의 안정을 의미한다. 소련 석유상황의 호전은 세계유가안정에도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사태의 긍정적 전개 외에 이라크·쿠웨이트

의 석유공급 재개가능성을 향후 국제석유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최근 쿠웨이트가 원유수출을 재개했으며, 이라크도 현재 원유의 일부수출을 허용한다는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있으나 MEES지는 오는 4/4분기와 내년 1/4분기에 이라크가 50만B/D의 원유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겨울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국제석유시장에 내놓을수 있는 원유재고는 4천만배럴을 상회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에 대한 석유금수조치가 계속되고 쿠웨이트의 산유량이 30만B/D를 하회하는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OPEC는 오는 4/4분기에 하루 2천4백만배럴의 생산능력을 유지할수 있다. 즉 성수기인 12월에도 OPEC의 공급능력이 2천5백만B/D를 상회한다는 계산이다. 국제원유가격은 이번 겨울철에도 배럴당 19~22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되는 장기유가전망은 지난해 8월 걸프사태 발생전의 전망치보다 완만하고 안정적인 유가 상승을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美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국(EIA)의 걸프전쟁 전후의 유가전망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이 유가전망의 내용은 불변 가격기준으로 유가는 오는 97년까지 배럴당 24달러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명목가격 기준으로는 연 3~4%의 완만한 가격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 전망치보다는 매우 완만한 가격상승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日本에너지경제연구원은 두바이의 경우 명목 가격기준으로 91년 17\$/B에서 95년에는 23\$/B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가격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4% 내외의 매우 완만한 가격 상승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도 걸프사태로 인한 기본적 구조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유세계 非OPEC산유국들의 경우 미국, 영국 등 대부분 OECD산유국들은 성숙유전을 보유하고 있어 전망기간중 지속적인 감산이 불가피하나 예멘, 시리아, 앙골라, 콜롬비아 등 신흥 산유국들의 지속적인 증산으로 감산은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